

# 전남광주 자치구 의회 개원부터 원구성 놓고 '진통'

### 남구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서 이견...개회 13분 만에 정회 동구·북구의회도 비민주 의원과 입장차...“존중·배려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가 개원과 함께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나섰지만 일부 의회에서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놓고 맞서면서 협치 부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5개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동구·북구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쳤으며, 남구의회는 이날

예정돼 있던 의장단 선출을 연기했다. 서구와 광산구의회는 오는 6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가장 큰 진통은 남구의회에서 벌어졌다. 남구의회는 이날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원구성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회 13분 만에 본회의가 정회됐다.

전체 12석 가운데 9석(75%)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 데 대해 3석의 조국혁신당이 반발한 것이다. 개회 직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의사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안전 상정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중단됐다.

고우람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섭단체가 구성됐음에도 민주당이 원구성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북구의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한양인 의원, 부의장에 최기영 의원을 각

각 선출했다.

당초 한양인 의원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지만 무소속 기대사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선이 치러졌다.

기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과거에는 진보당 의원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협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것 같다”며 “무소속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도 주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원내 활동에서 역할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의회에서도 민주당의 의장단 독식을 둘러싼 반발이 나왔다.

동구의회는 전남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재에 의원을 의장, 김대성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 김희선 의원, 사회도시위원장 안태자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홍두석 의원 등 주요 보직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에 진보당 박현정 의원은 의사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이곳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며 “의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해야 하는 만큼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은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도 오는 6일 원구성 절차를 진행한다. 두 의회 역시 민주당 중심의 의장단 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비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특별시민 주민등록증 발급 받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표기되는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정청래 전 대표, 호남 표심 잡기 ‘올인’

### 오월어머니집 방문...비공개 면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오월어머니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2일 오전 11시 전남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인 오월어머니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오월어머니집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거나 다쳤거나 또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여성들이 위로하고 연대하기 위해 설립한 쉼터다.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된 면담에는 정 전 대표를 비롯해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고문과 이춘희 관장 등 회원들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1시간여 이어진 면담에서 정 대표는 오월어머니 집 회원들이 가진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후 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오월 어머니

들 한도 풀어드리고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5·18과 관련해 추진한 올해 예산 성과를 오월어머니집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묘역 정비와 버스 교체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상 생활속에서 늘 마음 한켠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진한 아픔으로 응어리진 5·18의 상처를 이제 치유의 시간으로 승화시킬 때”라며 “환영해주고 응원해준 오월어머니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한 정 전 대표는 당 대표 연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관리당원이 집중된 전남광주, 전북 등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남에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과 전통시장을 찾아 전북 당시 공약에 주력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당 8·17전대 ‘권리당원 표심’이 당락 좌우

### 대의원·권리당원 70% 유지하며 ‘1대1’ 첫 적용 일부 가중치 두는 전략지역은 내주 의결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과 권리당원 표를 기준과 같이 70%로 반영하면 서도 이를 1대 1로 반영키로 해 사실상 권리당원 표심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부위원장이 송옥주 의원은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 당원주권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구현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전준위 의결내용은 지난 1일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 보고됐고, 당무위원회 의결만 남겨 둔 상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70%까지 반영하는 것은 지난 2022년 8월 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지난 2024년 전대에서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를, 지난해 임시전대에서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를 각각 반영했다.

하지만 이번 전대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에 따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심을 동등하게 반영

키로 했다.

앞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경기 전대에서도 이를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대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는 ‘1대 1’ 수준으로 반영됐기에 대의원 표심이 당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당원 투표 결과가 1대 1로 반영되면, 대의원은 1.5%, 권리당원은 98.5% 수준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전대 기준 전국 대의원 수 1만6831명, 권리당원 수 111만732명)

전준위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전국 대의원 수를 모두 1만52명으로 정했다. 이 중 선출직 대의원은 7620명으로 정했다. 이에 비해 권리당원의 수는 11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대의원의 투표결과가 경선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해 사실상 권리당원들에 의해 당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앞서 부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당원 표심 반영비율 변화와 관련해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다”며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전략지역의 경우 당헌에 따라 가중치를 두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준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2차 회의를 마치고 이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전략 지역을 설정할지 논쟁이 있다”며 “다음 주에 의결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오는 16~17일이다. 지역위원회별로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는 19일 열리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비경선은 오는 21일 시행된다.

시도당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광주·전남 △16일 경기·서울이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다음 달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이 의원은 전대 출마가 유력시되는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에서 순회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데 대한 당내 논란과 관련하여는 “현재로선 의결(결정)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전남광주 청년농업인 중심 차산업 키운다

### 농기원, 청년농업인과 소비시장 확대 방안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이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차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은 최근 나주의 한 티하우스에서 차 생산 청년농업인과 차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차 청년 농업인 차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농업인의 현장 의

견을 반영한 차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차 재배면적의 35~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차 주산지다. 보성과 장흥, 강진을 중심으로 생산 기반이 형성돼 있으며, 농업기술원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비시장 확대를 차산업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차 생산과 가공 역량을 소비·유통 기반과 연계하는 공동사업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차 박람회와 지역축제 공동 홍보관 운영, 차분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별 강점을 활용한 협력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전문 차분화를 이어온 기성세대와 청년 창업 농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차를 생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농가 간 정보교류와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교통공사, 도시철도 손실 국비 보전 방안 모색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 연구용역 착수

광주교통공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교 통공사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것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정책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6개 기관은 종합계약 방식으로 용역비를 공동 분담하며, 이날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착수보고 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운영기관 재정 및 적자 원인 객관적 규명,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방안 및 로드맵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낮은 운영체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를 구분해 분석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수송 확대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시된 ‘적자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객관적 수치 확보’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까지 도출될 예정이다.

6개 운영기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갈 방침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면제하는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받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원에서 2025년 7754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손실 규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복지정책인 만큼 그 비용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